

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오금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3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 의 자: 오금란, 강석주, 김성준,
김원태, 민병주, 박수빈,
박승진, 박춘선, 박철성,
서상열, 송도호, 송재혁,
신복자, 왕정순, 유만희,
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
정준호, 최재란, 홍국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수어통역센터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보제공, 문화·정서·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.
- 또한,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,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법적·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·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, 청각·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, 현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,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청각·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 운영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다. 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라.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마.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- 바.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국수화언어법」

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·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각·언어장애인”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수어”란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.
3. “수어통역사”란 청각·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,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
4. “인공지능 수어번역”이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·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 일반원칙)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

청각·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센터는 청각·언어장애인의 권리·욕구·연령·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·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·언어장애인
2. 청각·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
3. 그 밖에 청각·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

제5조(사업내용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청각·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
2. 공공·의료·법률·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
3.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
4. 청각·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
5. 청각·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·심리·정서적 지원
6.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7. 그 밖에 청각·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,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를 준용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센터는 청각·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5조(사업내용)	△	[추계 곤란]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 없는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5조(사업내용)의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비용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) 문의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·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(도입규모 결정 필요) 인공지능 수어번역 활용분야¹⁾에 따라 도입규모가 달라지므로 정책적 판단 전제 필요
-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현재 활용분야에 대한 관점 차이²⁾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규모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사사례(키오스크, 누리집 등) 등을 준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서비스 도입규모별 비용차이 상당] 키오스크나 누리집 내 시스템 안내와 같은 일부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와 일상생활 전반위에 대한 서비스의 도입비용 차이는 매우 크므로 활용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소요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임

2) [수어특성을 고려한 도입신중성 고려] 수어는 언어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, 이에 번역의 정확성 확보가 핵심요소이므로 해당 서비스 도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도입규모에 대한 관점차이(재정투입 적정성 및 효율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종합적 고려)가 있는 것으로 보임